

# “국내산 먹거리 통째로 내줘...벼랑끝 한국농업 붕괴 위기”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농업계·지역정치권 격렬 반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서삼석 의원),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전해진 이후 전남 농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우리 농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엿볼 수 있는 지적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농민들=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시기가 문제일 뿐 외국산 쌀·고추·마늘·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태껏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선언하고 관세나 보조금 정책에서 개도국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쌀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특별품목으로 지정, 외국산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매기며 보호해왔다. 고추는 외국산에 270%의 관세율을 적용, 국내 시장을 보호했고 마늘(360%), 양파(135%) 등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시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조정이 이뤄져 국내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가뜰이나 수입산에 밀리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낮아지면 국내 농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지 모른다

쌀 513%→154% 등 관세 인하

1조5000억원 보조금은 반토막

대책 못내놓은 정부 “영향 미미”

개 농민단체측 하소연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차기 농업 협상 때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데다, 협상 시기와 타결 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려워 당장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 압박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그동안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던 쌀이 일반품목으로 풀리면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지고 양파는 41%까지 내려간다. 전남 지역 쌀 생산량은 전국의 20.1%(2018년 기준), 마늘은 23.1%(2017년 기준), 양파 45.0%( )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관세율 인하가 현실화되면 지역 농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농업 활성화대책은 지지부진=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보조금 축소도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최대 1조49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면 최대 8195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급해온 보조금이 낮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단체 주장이다. 농업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서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6000억원)인 15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공약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뜰이나 어려워지는 농촌 현장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난해 정부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자조금지원사업(69억), 비축지원(5610억), 농업관측사업(85억), 노지제초수급안정 사업(1993억),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168억), 과실수급안정사업(400억) 등 8400억원에 달하지만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서삼석 의원 분석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만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농정대개혁

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착역’ 조국 수사 속도...이르면 주말께 소환 가능성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11개 혐의 중 4개 연관 의혹

정부 추진 검찰개혁 영향 주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중착역’인 조 전 장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최정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도 ‘늘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가 빠른 속도로 정점을 향해 치닫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있어 정 교수의 혐의

소명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진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익원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

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외 추가로 진행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 범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기 때문에 이달을 넘기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진다.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나기 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의 틀을 짰다. 정부는 심야·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 교육 관련 장관회의 입시제도 논의 공론화위 ‘정시 40% 안팎’이 기준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시 공론조사 결과는 정시 확대에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론조사를 시행했으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또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정시 비중 40% 안팎’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에 위치한 이른바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주요 대학들에 ‘40% 안팎’으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